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제정 2016.7.12., 개정 2019.5.29., 개정 2020.3.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감사규정」제16조에 정한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을 위해 세부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기정원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기정원의 발전 및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기정원 “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제2호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라 함은 감사규정상의 경고, 징계 등의 신분상 처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정원 감사규정에 따라 통보되어 실시하는 감사업무에 적용된다.

제4조(면책 대상자) 이 지침에 의한 면책은 기정원 감사규정에 의한 자체감사 대상 업무와 관련된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자체감사를 받은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개정 2019.5.29.>
2. <삭제 2019.5.29.>
3.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개정 2019.5.29.>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금품을 횡령·유용한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 면

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0.3.19.>

제6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의 추정) 피감사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5조 ①항 제4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삭제 2019.5.29.>
2. <삭제 2019.5.29.>
3.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개정 2019.5.29.>
4. 피 감사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제7조(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설치) ① 원장은 적극행정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적극행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와 협의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감사담당부서장을 포함하여 원장이 감사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인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의 면책심사 신청 안내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피감사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책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당해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면책심사 및 처리)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의 면책심사결과서에 따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최종 양정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처분요구를 한 경우에는 처분요구의 시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2016.7.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5.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3.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